시 론

청년을 데려오려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포부

이 정 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가 작년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다. 하지만 고흥은 초고령사회를 넘어 '초초고령'사회다. 고령인구 비율이 45.7%(2024년 12월)다. 고흥은 고령인구 비율 전국 1위를 꽤 오래 유지했다. 지금은 경북 의성(47.5%)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고흥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고흥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면적은 상위, 인구는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은 중위 그룹에 속한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도 면적은 3위, 인구는 8위, 지역내총생산(2021년)은 12위다. 고흥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인구 환경은 정반대였다. 고흥 인구는 1966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출생자수가 감소해서다. 1970년대엔 인구 유출이 감소세를 주도했고, 특히 청년층(20대) 탈출이 심했다. 이후 청년층 엑소더스는 계속됐다. 실제로 고흥군 인구이동(2006년-2016년) 분석 결과, 20대(59.9%)가 인구 유출을 주도했고, 이들은 광주(29.7%), 순천(24.7%) 서울 경기(21.1%) 등지로 떠났다(이정록, 2020, 인구이동과 인구구조: 고흥군 사례). 청년층 탈출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율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고흥은 전국 농어촌 지역들보다 유독 심했다. 그 결과 고령인구 전국 2위가 됐다.

1970년대 고흥 엑소더스 대열에 풍양 출신 스무 살 청년 공영민도 합류했다. 공무원이 된 그는 마산 태양극장 직원, 삼성상회 서기 등의 이력을 떨쳐 버리고 고흥을 과감히 떠났다. 고향 동창 소개로 서울 출신 여성과 결혼해 서울 사람이 됐다. 고향에 있던 동생들도 서울로 불러들였다. 청년층 고흥 탈출에 일조했다.

청년 공영민의 서울 생활은 순조로웠다. 서울역 기능직 공무원에서 7급 공채에 합격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제기획원(현 기재부)에 입성했다. 부이사관까지 승승장구했다. 정규 중학교도 아닌 고등공민학교 출신이 고졸 검정고시를 거치고 방통대를 나와 박사까지 됐다. 흙수저가 쓰는 '출세 신화'는 재경고흥향우회원들에게 자랑거리였다.

고위공무원 공영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2010년 제주도청 지식경제국장 발령이었다. 당시 제주도는 인구감소가 발등의 불이었다. 출산율이 1.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하는 임무가 그 앞에 놓였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을 거치면서 인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공영민에게 재경고흥향우회원들 성화가 빗발쳤다.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책 '지방 소멸'이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했고, 고흥이 한국판 지방소멸 1-2순위로 알려졌을 때다. 고향에 내려가 고흥의 영화를 재현해 보라는 재촉이었다. 군수가 되려고 정당에 가입해 공천도 받았다. 하지만 1차전은 완패였다. 4년 재수 생활은 고흥 현주소와 문제를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공영민은 고흥군수로 취임했다. 인구 문제를 핵심 군정 과제로 설정했다. 인구 감소를 억제하려면 청년을 고흥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구담당 부서를 '실'로 격상시켜 서기관을 배치했다. 청년 정착과 창업 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승부수를 띄웠다. 그 결과 출생아수 감소와 사망자수 증가로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지만, 2022년 말부터 전입이 전출보다 늘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공 군수의 리더십 결과는 또 있다. 취임 후 청년을 데려오기 위해 '고흥형 농축수산 스마트팜밸리'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11월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원예·축산·수산양식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모으겠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스마트 원예단지 교육 수료생 중엔 고흥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공 군수의 이런 계획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6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광주와 전남에선 매년 1만여 명 청년이 수도권으로 탈출한다. 일자리를 찾아서 새로운 꿈을 쫓아서 떠난다. 청년이 떠나면 출생률이 낮아 노인천국이 되고 활력을 잃어 소멸의 늪으로 빠진다. 스무 살에 고향을 탈출한 청년 공영민이 군수가 돼 청년 인구 정주와 정착에 방점을 찍는 이유다.

고흥에 청년을 데려오려는 공 군수 계획은 백번 옳다. '억대 농어부'를 꿈꾸는 청년을 스마트팜밸리로 견인하고 지원하면 능히 가능하다. 공 군수의 원대한 포부가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

社 說

전남 벼 재배면적 강압적 감축은 이미 예견된 반발

올해 8만ha 감축을 목표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전남지역이 1만5천831ha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기준 14만7천738ha의 10.7%를 차지한다.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면적(8천492ha)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쌀값 하락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득 감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입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이라며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정작 인센티브는 미미하고 미이행 시 페널티까지 부과하면서 옥죄고 있다. 미달성 지자체에 공공비축 물량의 최대 15% 페널티를 부과하고, 개별 농가엔 아예 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남도가 세차례나 공문을 보내 불합리하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사실상 강압적인 조치라며 농민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영농권·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개혁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작목 전환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도 없이 일방적 추진이라며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41만톤에 달하는 수입산의 부정 유통 등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재난 식량 위기를 대비하는 미래 전략도 찾아보기 어렵다. 불가피하다는 배경 설명, 설득력이 떨어진다.

농민들의 생산 기반이 무너져선 안 된다. 고령화 심화로 휴경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한번에 둑이 붕괴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쌀 생산만 줄이고자 하는 것은 추후 뒷감당만 키울 수 있다. 전남도는 공익직불금 추가 지급 등 소득 보전, 밭작물 시설 구축 지원, 사료용 쌀 확대 재배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벼 농사가 줄지 않는 사정을 직시해야 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솜방망이 화정아이파크 판결 국민 법 감정과 안맞아

부실 공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솜방망이'였다. 현장 소장 등 5명만 최고 4년 징역의 실형을 받았으며, 경영진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도 않았다. 법인 3곳 벌금형은 1억-5억원에 그쳤다.

2022년 1월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신축 중인 아파트 201동 최상층인 39층 바닥면 타설 과정에서 23층 천장까지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검찰은 건물 구조 검토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의 지지대인 동바리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17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하지만 2022년 5월에야 시작된 재판은 장기화됐다. 피고인들과 법인들은 과실 소재 등을 두고 서로 전가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여 눈총을 샀다.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데다 재판부까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3년 만에 1심 형량이 나왔는데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최대 10년 징역형, 벌금 10억원에도 못미쳤다. 대형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엄벌을 기대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다. 현산 경영진의 경우 추상적인 지휘 감독의 책임은 있더라도 소속 직원의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는 없다고 봤다. 꼬리 자르기가 현실이 됐다. 유가족들은 말단이나 하청 직원만 처벌받은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법원 판단을 이유로 미뤄진 광주 서구와 서울시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도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본사가 소재한 서울시에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구했었다.

화정아이파크는 상가(1-3층)를 제외한 주거층 철거가 모두 끝나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재시공에 들어갔다. 상상하기조차 참혹한 인명 피해가 난 참사다. 입주가 미뤄진 분양자는 물론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 사고 책임 규명을 위한 첫 판결이라기엔 부족했다. 현산 스스로도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장칼럼

2025년 달라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설 명 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경직되고 움츠렸던 마음들이 하나 둘 녹아내려 모든 국민의 가정에 행복하고 희망찬 기운이 내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섰고 11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 명을 돌파했다. 말 그대로 초고령사회가 도래했으며 노후 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2.3% 인상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실질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이다.

가령 2024년 12월에 50만원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2025년 1월부터는 2.3%가 인상된 51만1천5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340만8천원에서 364만8천으로 약 7%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그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또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4천810원에서 2025년 34만2천510원으로 늘어나며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양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2025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중 230만원 이하자는 연금보험료의 80%, 230만원 초과 270만원 미만자는 16만5천600원으로 정액 지원받게 된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상용·일용근로자가 해당되며 2018년 1월 이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외에도 실업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등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언론·현장홍보·미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SMS 발송 등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해 신청 안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독자투고

설 명절, 특별한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따뜻한 시간이 펼쳐진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최근 주택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음식 준비와 난방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선물로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주택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통계에 따르면 화재 초기 5분 내의 신속한 대처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이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모든 가정에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안전 장비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에 동참해 안전한 명절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소방시설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명절이 더 따뜻하고 안심될 것이다. 올 설에는 안전과 사랑을 함께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보자.

〈박태후·곡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도 처벌된다

음주운전자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도망가려는 심리 때문에 들통날 상황이면 편의점 등에 뛰어가 술을 마셔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꼼수(일명 술타기)를 부려 악용하는 사례가 확산돼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2024년 12월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자가 이후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됐다.(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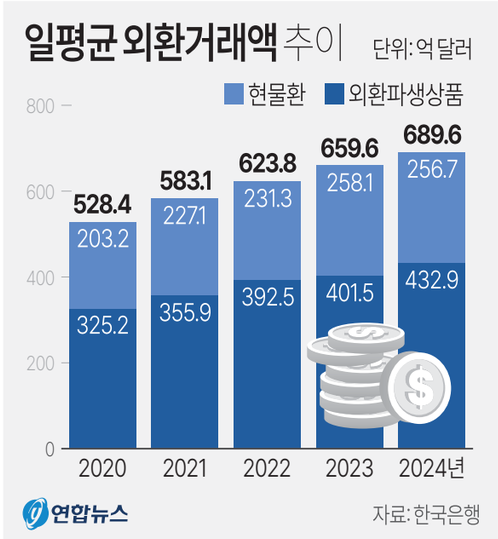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구정 연휴는 6일 이상 지속돼 친인척, 지인들과 술자리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 안하기'를 실천해 타인과 자신의 생명·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겠다.

〈박희웅·영암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작년 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수출입·증권투자↑ 영향"



지난해 수출입과 증권 투자, 환(換)헤지(위험분산) 등이 늘면서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작년 외국환은행의 1일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89억6천만달러로 집계됐다.

2023년(659억6천만달러)보다 4.6%(30억1천만달러) 많고,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증가 배경을 두고 "수출입 규모,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환율 상승에 따른 환 헤지 수요 등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256억7천만달러)가 0.5%(1억3천만달러) 줄었지만, 외환 파생상품 거래(432억9천만달러)는 7.8%(31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외국환은행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환 거래액(309억6천만달러)이 1.8%(5억4천만달러),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 거래액(380억1천만달러)도 7.0%(24억7천만달러)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